

‘경영 어렵다고’...사업장 92곳서 상승 체불임금 총 91억 적발

고용부, 9~11월 의심 사업장 131곳 기획감독 결과 69곳 즉시 사법 처리...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 지원 고용장관 “임금체불, 명백한 범죄 행위...근절할 것”

#1.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A사는 업황 부진, 투자 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7억원을 체불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A사는 이전에도 36건, 총 99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는 등 상승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승강기 제조·설치 업체인 B사는 예전부터 85건, 총 13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감독 결과 여

전히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건설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는 등 상승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상승·고의 체불 의심 사업장 112곳과 건설현장 12곳 등 131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92곳(72.0%)에서 총 91억원의 체불 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

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임금과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의 체불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건설 현장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체불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 임금을 상승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수년간 각종 수당을 체불하기도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중소기업 C사는 캐릭터 사업의 해외 매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개월간 근로자 3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6억8000만

원을 체불했다. 이전 체불액도 26건, 총 2억원에 달했다.

또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분야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D사는 현장 근로자 191명의 한 달치 임금 총 5억70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정별 팀장 9명에게 나눠 일괄 지급했다.

고용부는 이 중 상승·고의 체불 정도가 심각한 69곳의 148건 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강도 높게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단일 기획 감독으로는 최대 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 처리”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청산 계획을 제출 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승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 제재,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사랑의 온도, 이제 높여주세요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있다.

광주서 6개월 아이 15층서 던진 20대母...이틀전 ‘가정폭력’ 신고해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어머니가 영아 자녀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수일전 ‘가정내 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머니 A(25)씨가 생후 6개월 영아를 금호동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전인 지난 1일 오전 3시에 경찰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고는 내용은 어머니 A씨가 “가정 폭

력 신고할게요”라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 등이 “사건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신고 이틀만인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아파트 15층에서 영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이 발견해 119 등에 신고했다.

또 부부싸움 뒤 남편 B(35)씨는 집을 나갔

으며 A씨는 “아이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에게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부부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스

“공무원도 괴롭힘 신고 될까”...직장갑질 문답 보고서 발행

직장갑질119, 공무원 직장갑질 50문답 보고서

직장갑질119가 공무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해결 방법 등 궁금증 50가지에 대한 답변 보고서를 발행했다.

3일 직장갑질119는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공무원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갑질 50문 50답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대법원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이후 무엇보다 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

다”고 보고서 발행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공무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공무원은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괴롭힘 가해자가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퇴직 희망 공무원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어 내부감사·

조사 혹은 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괴롭힘 가해자가 퇴사하기 전에 정식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소속이 다른 공무원 간 부당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가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일 경우 대응 방법도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등 공무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고서에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이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갑질로 고충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수권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